



주간 통일정세

2013-0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평양 만수대 김정일동상, 코트 벗고 점퍼 차림 '변신'(2/1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설을 맞아 주민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 주석의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만수대언덕을 찾아 헌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1면에 게재함.
 - 이 사진을 보면 코트를 걸친 김일성 동상 모습은 과거와 다르지 않지만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 1주기 때만 해도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던 김정일 동상이 점퍼 차림으로 바뀌었음.

- **北김정은, '김정일 시계표창' 제정·수여(2/1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진 '김정일시계 표창'을 제정하고 15일 유공자들에게 이 표창을 처음으로 수여함.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의 71회 생일(2월26일)을 하루 앞둔 이날 '김정일시계 표창' 첫 수여식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北 김정일 생일 맞아 다양한 경축행사(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경축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에 있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을 가짐.
 - 이 자리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함.
 - 최룡해 국장은 제막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군력을 강화함으로써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책동을 짓부시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자들을 단숨에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리설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종합)(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16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71회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당·군 주요인사들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과 리설주는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뒤 김 위원장 시신이 있는 영생홀과 훈장보존실, 열차 보존실 등을 둘러봄.

■ **김정은동향**

- 2/12, 김정은 당 제1비서, 원군사업과 중요대상건설 지원 일꾼·근로자들(농업과학원 연구사, 칠성각 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2.12, 중방)
- 2/15, 김정은 당 제1비서, 2.15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표창 첫 수여식 참석(2.15, 중통·중방·중앙TV)
 - 당 중앙위 회의실에서 조국보위와 강성국가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력혁신자들에게 시계표창 수여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조연준 등
- 2/16, 김정은 당 제1비서, 2.16 리설주와 함께 '김정일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통·중·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영철·김격식·김경희·박도춘·김영춘·현철해·김원홍·김정각·주규창·김경옥·윤정린·최부일·리영길·손철주·렴철성·조경철·윤동현·강표영·리명철·김락겸·박정천·김춘삼·김영철·전창복 등 참가
 - 김영남·최영림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단·재일본조선인 대표단 등 외국손님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중통·중방)
 - 당·무력·정권기관·사회단체·성·중앙기관·인민군들과 駐北 중국 대사 등, 2.16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2.16, 중통·중방)
 - 강계시·함흥시 등 各道 소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인민군·주민 등 참배
- 2/16, 김정은 당 제1비서, 2.16 만경대혁명학원에 건립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석(2.16, 중통·중·평방)
 - 최영림·최룡해(제막사)·장성택·현영철·김격식·김경희·김기남·김영춘·리용무·오극렬·현철해·김정각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2.11 평양에서 진행(2.12,중통·중방)
 - '정권수립일(9.9절) 65돌과 정전협정체결일(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7.27)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 채택과 대책적 내용들(10가지) 결정
- 김정일 생일 경축 백두산밀영 결의대회, 2.12 김기남·김영춘·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 등 참가下 진행(2.12,중통)
 - 김정일 생일 7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2.15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15,중통·중방·중앙TV)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노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유미영 등
 - 제3차 핵실험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한 정당당한 대응조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더욱 강도높이 벌여나갈 것임.

나. 경제

- 北, 작년 스위스 시계 수입액 70% 증가(종합)(2/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지난해 스위스 시계 1천499개(20만8천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스위스시계산업연합' 자료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기계식 손목시계 365개, 전자식 손목시계 1천134개로 2011년 전체 수입량 1천513개보다 조금 줄었지만 수입액은 12만2천여 달러와 비교해 70% 증가함.

다. 군사

- 北, 핵실험 전날 ICBM급 'KN-08 미사일' 엔진시험(2/17, 연합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핵실험 하루 전인 지난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KN-08'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이 17일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평양에 24시간 영업 약국 등장(2/11, 연합뉴스)
 - 11일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인터넷홈페이



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평양시 중구역에 하루에 24시간 영
업하는 '대동문 약국 체인점'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스제약합영회사는 "대동문 체인점은 평양에서 하루에 24시간, 한 주
에 7일간 영업하는 첫번째 약국"이라며 이 약국이 평양에서 최고층 아
파트 단지의 1층에 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서
가깝다고 소개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북한 '광명성절' 앞두고 중국서 방북 행렬(2/14, 연합뉴스)

-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이틀 만인 14일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번째 생일(2월 16일)을 앞두
고 방북 행렬이 이어짐.
- 매일 한차례 왕복 운행하는 단둥-평양 국제열차는 평소 2~3량으로 편
성됐던 것이 이날은 객차를 6량으로 크게 늘림.

● 주한스위스대사 "핵실험에도 北 인도적 지원 계속"(2/16, 연합뉴스)

- 요르크 알로이스 레딩 주한 스위스대사는 스위스 정부가 최근 3차 핵실
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
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레딩 대사는 16일 한·스위스 수교 50주년을 맞아 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과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개인 의견을 소개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핵잠수함·이지스순양함의 韓美연합대잠수함훈련 참가 및 한반
도 수역으로 항공모함 기동 관련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의 기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철
저히 격멸 소탕해버릴 것'이라고 주장(2.11, 중통·노동신문/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책동)

나. 6자회담(북핵)

● 北, 3차 핵실험 강행...함북 길주서 인공지진 발생(종합)(2/12, 연합뉴스)

-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57분 50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도로 분석됐으며 이곳은 북한



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부근임.

● **北핵실험 폭발력 6~7kt 추정... "증폭핵분열탄엔 못미쳐" (2/12, 연합뉴스)**

- 북한이 12일 실시한 3차 핵실험의 파괴력이 6~7kt(킬로톤)으로 지난 1, 2차 핵실험 때보다 파괴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핵실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평가한 진도가 4.9이고 이를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 규모는 6~7kt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사 발표 전문(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다음은 중앙통신이 전한 발표보도 전문임.
-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체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중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
-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다.』

● **오바마 "北핵실험은 도발행위...필요조치 단행" (종합) (2/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오늘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 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핵



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함.

● **北외무성 "2, 3차 대응할 수도...美, 양자택일해야"(종합)(2/12, 조선중앙TV)**

- 북한은 12일 실시된 핵실험을 1차 대응조치라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이 대조선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으며 "위성발사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또 "원래 우리에게는 핵실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며 "이번 핵실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보여주고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밝힘.

● **北, 3차 핵실험 강행... "2·3차 대응조치" 위협(종합)(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제3차 지하 핵실험(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실험은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함.
- 또한 "다중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언급,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 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오바마 "핵실험 도발은 북한 더욱 고립시킬 뿐"(종합)(2/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기 임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며 "어젯밤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핵실험) 도발들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 **외통위,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2/13,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으로 조정된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



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내용을 담음.

● 50개국·5개 국제기구 규탄성명(종합)(2/14,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13일 오후 현재 50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외교통상부는 배포 자료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 50개국이 북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힘.
-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 등 5개 지역·국제기구도 규탄 성명을 냈음.

● 北 "조선반도는 우발적 사건에도 전면전 갈 수 있어"(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에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첨예한 상태"라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조선반도 사태악화의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결코 벌여지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한미 전력의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되는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침략행위"라고 비난함.

● 北, 외신 핵실험 보도 소개...中매체 반응 '누락'(2/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우리 공화국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소식을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다"며 세계 각국의 보도내용을 소개함.
- 방송은 먼저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핵실험이 이전보다 폭발력이 크고 소형화·정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했다고 전함.
- 또 쿠바의 통신사, 오스트레일리아의 ABC방송,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AP통신·미국의소리(VOA)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NHK방송이 '조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고 소개함.



- **北 "우리도 ICBM 가져야...제재할테면 하라" 위협(종합)(2/14, 노동신문)**
 -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 사흘째인 14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이날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우리의 핵은 정의의 선택이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라며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최고의 징벌이며 천 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산아"라고 밝힘.

- **北 '핵실험 성공' 자축... "최대 격동상태 견지"(2/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군인과 주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군민연환대회'를 열고 제3차 핵실험의 '성공'을 자축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녹음실황'으로 보도함.
 -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는 대회 연설에서 제3차 핵실험을 "민족사적 쾌거"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함.
 -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의거해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기상을 안고 나라의 자주권을 결사 수호하기 위해 전면 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함.

- **미국 상원 외교위, '北 핵확산 금지법안' 승인(2/15,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에 전함.
 - 상원 외교위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이 전날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 S.298)'을 통과시킴.

- **北김영남 "핵실험은 美적대행위에 대한 정당 조치"(2/15,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이번 제3차 핵실험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대응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함.



- 또 유엔의 대북제재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대해 "오직 총대로 미국과 기어이 최종 결판을 내고야 말 천만군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총폭발시키고 있다"며 "정의의 위협에 맞서는 자들에게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안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해 온 세계의 자주화 위협을 앞장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연내 추가 핵실험 계획 중국에 전달(종합)(2/15, 로이터통신)**

- 북한이 연내 핵실험을 한 두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임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북한과 중국의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북한의 메시지를 직접 알고 있는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회답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4차, 5차 핵실험과 함께 로켓 발사를 곧, 아마도 올해 안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핵실험금지기구, 北 인공지진 규모 5.0→4.9 수정(2/16, 연합뉴스)**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당초 5.0에서 4.9로 다소 낮췄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CTBTO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96개 관측소에서 북한의 지진활동에 대한 관측자료를 보내왔다"며 수정된 규모인 4.9가 확정된 값이라고 전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3단계 요격미사일실험' 진행 관련 '그 누구의 미사일 위협설을 코에 걸고 힘에 의한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날뛰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北)를 선제공격한다면 무서운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2.11, 중통)
- 【외무성 대변인 담화(2.12)】 '이번 핵실험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로,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위협(2.12, 중통·중방·평방·중앙TV)
 - 적대세력이 떠드는 선박검색, 해상봉쇄 등은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본거지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임.
 - 미국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겠는가 아니면 대북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하여 정세폭발을 향한 잘못된 길을 계속 걸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임.
- 【중앙통신사 논평】 '제3차 지하핵실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처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 2·3차 초강경 조치의 실시는 미국의 차후선택에 달려있다'고 거듭 주장(2.13, 중통/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전황에 대처한 정정당한 자위적 조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제재 강화하면 무자비한 보복타격" 위협(2/15, 노동신문)
 - 북한은 15일 핵실험에 따른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가 보복타격을 유발할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이날 '제재 강화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미국에 아부추종하여 계속 제재강화로 나간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 행위로서 선박 검색과 해상 봉쇄 등 각종 제재의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도발자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줄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며 "민족을 배반하고 제재 강화에 나서는 역적무리들에게는 비참한 종말 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주장함.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핵실험> "중국과 비밀담판 결렬되자 강행"(2/13,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의 비밀 담판이 결렬되자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대만 언론이 일본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연합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건 '모종의 조건들'이 받아들여지면 핵실험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 협상은 지난 주말까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핵실험을 반대해온 중국 측에 제시한 모종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 대만 언론은 중국의 잇따른 만류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북한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음. 연합보는 북한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핵실험을 계속 준비했다고 설명함. 신문은 지난 주말 위성사진 등에서 북한 핵 실험장 인근의 차량 이동이 줄어들고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위장전술'로 보인다고 진단함.
 - 이번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에도 순탄치 않은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북·일 간 대화가 당분간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연합보는 적었음.
- 北 "우리도 ICBM 가져야...제재 할 테면 하라" 위협(2/14, 연합뉴스)
 - 북한은 3차 핵실험 강행 사흘째인 14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계속함.
 - 특히 이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권리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우리의 핵은 정의의 선택이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라며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최고의 징벌이며 천 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산아"라고 밝힘. 노동신문에서 정론은 북한



- 의 정책 방향 등을 담고 있어 가장 권위 있는 글로 평가됨.
- 북한이 그동안 자신들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국제사회가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로 문제 삼는다면 반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언급은 주목됨. 정론은 "미 제국주의는 지금까지 있는 모든 항전 중에서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정의로운 인민의 대항전과 맞섰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제 더는 타협이 없는 제국주의와의 마지막 판카리 싸움이며 인류역사에서 자주성의 승리와 제국주의 종말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극적인 사변과 잇닿아 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밟개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제재를 할테면 하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미국의 제재봉쇄책동이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면 "적들이 반공화국책동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질적인 대응 조치들을 연속취하면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심지어 사설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던 침략의 본거지들을 정밀 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위협함.
 - 앞서 북한은 핵실험 당일인 지난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13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침예한 상태"라고 주장함.
- "北무수단리 활동 분주.. 추가 로켓발사 준비"(2/15, 연합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장에서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듯한 움직임이 포착됨.
 -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38노스(38 North)'는 14일(현지시간) "무수단리의 동해 위성발사장 건설작업이 지난해 여름 태풍 피해로 차질을 빚었으나 최근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실제로 미국의 상업위성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Digital Global)'가 지난달 촬영한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발사장의 크레인 위치가 바뀌고 골조물 인근의 눈이 치워진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38노스는 액체연료 로켓의 시험발사가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특히 최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또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인 'KN-08'의 발사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을 소개함. 또 작년 12월12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은하 로켓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음.

- 이와 함께 무수단리의 새 발사대와 지원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건설 속도로 볼 때 북한이 이르면 2016년 은하 로켓의 3~4배 크기에 달하는 대형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음. 38노스는 또 새 발사대 주변의 건축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힘. 특히 새 발사대에 설치된 '플레임 트렌치(분출가스로부터 로켓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란 썬란 발사장에서 쓰인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함. 또 발사대와 로켓 엔진 시험대에 설치되고 있는 '추진제 도관(propellant conduit)도 썬란 발사장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분석함.

● **北, 핵실험 전날 ICBM급 'KN-08 미사일' 엔진시험(2/17, 연합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핵실험 하루 전인 지난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KN-08'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이 17일 전함.
- 한 소식통은 "북한은 시험 발사한 적이 없는 KN-08의 사거리를 ICBM급인 5천km 이상으로 확실히 늘리려고 엔진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엔진 성능개량 시험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함. 작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을 기념해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서 6기가 공개된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됐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음.
- 군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북한이 추가 도발의 하나로 KN-08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이용해 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다른 소식통은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노출되는 시간에 KN-08의 엔진시험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한미가 주시하는 KN-08에 대한 엔진시험을 핵실험 전날 했다는 것은 대미 위협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밝힘. KN-08 장거리 미사일은 지름 2m, 길이 18m로 작년 퍼레이드 당시 중국군 산하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TEL에 탑재돼 모습을 드러냈음.
- 한편 한미 양국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발사장(동해위성발사장)의 크레인 위치가 바뀌는 사실 등을 이유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 미국 인터넷매체의 보도와 관련, "발사대 시설을 일부 보수하는 작업으로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는 아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나. 미·북 관계

● **美상원, '北 핵확산 금지법안' 추진(2/15, 연합뉴스)**

- 미국 연방 상원에서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 14



일(현지시간) 현지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을 발의함.

- 법안(S.298)에는 바브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벤자민 카딘(민주·메릴랜드), 밥 코커(공화·테네시),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양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화당 외교위 간사, 공화당 군사위 간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장, 유력 대권 후보 등이 합세함에 따라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 관측임. 한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상임위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음.
-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음.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대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토록 함.
-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특히 법안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밖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북한인권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도 주문함.
-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대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과 이란이 지난 1980년대부터 광범위한 군사협력이 있었다고 지적함. 이밖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계승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인권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비판함. 외교소식통은 이 법안이 전날 외교위에 상정됐으나 랜드 폴(공화·캔터키) 상원의원이 '무력사용 승인'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심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北김영남 "핵실험은 美적대행위에 대한 정당 조치"(2/15,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광명성 3호' 발사



- 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이번 제3차 핵실험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한 정정당한 대응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또 유엔의 대북제재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대해 "오직 총대로 미국과 기어이 최종 결판을 내고야 말 천만군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총폭발시키고 있다"며 "정의의 위업에 맞서는 자들에게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안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해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앞장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김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군사강국으로,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 떨치고 한 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승리의 승리를 이룩했다"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가져온 "역사의 기적"이라고 부각하기도 했음. 대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장성택·김영춘·오극렬·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박도춘·곽범기·김평해·김영일·주구창 당비서, 강석주·로두철 내각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병삼 인민보안부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함. 지난해 2월15일 열린 김정일 위원장 70회 생일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이날 행사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음.

다. 중·북 관계

● 北, 외신 핵실험 보도 소개...中매체 반응 '누락'(2/13,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우리 공화국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소식을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다"며 세계 각국의 보도내용을 소개함.
- 방송은 먼저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핵실험이 이전보다 폭발력이 크고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했다고 전함. 또 쿠바의 통신사, 오스트레일리아의 ABC방송,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AP통신·미국의 소리(VOA)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NHK방송이 '조선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타전했다고 소개함.
- 그러나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북한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역시 "인공위성과 장거리로켓을 계속 발



사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와 관련한 소식을 러시아와 미국, 일본 매체들이 내보낸 사실을 이날 소개했지만 중국 측 보도는 거론하지 않았음. 북한이 국내 주요현안과 관련한 외신보도 동향을 소개하면서 중국 측 보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이후 포착된 북중간 이상 기류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북한 핵실험, 미국 군사력 증강의 빌미" <중국 언론>(2/14, 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우방들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2/14)가 14일 보도함. 신문은 이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주의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전함.
- 왕판(王凡)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우방들이 북한 핵실험과 이른바 도발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더 자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왕 소장은 또 "그들은 북한을 봉쇄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도 서두를 것"이라고 우려함. 미국과 한국, 일본은 13일 평양을 억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루안종쩌(阮宗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가리앉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왕 소장도 한국의 군사적 대응은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과 그 우방들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우려함. 루안 부소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위협에 대응할 보호막 제공을 약속한 것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동아시아지역 군사력 파견의 빌미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음.

● 중국서 '北=방화벽' 회의론... "北 보호국 아냐"(2/14,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에서 북한이 미국의 세력 확대를 막아주는 전략적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음.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은 13일 중화권 온라인 통신사인 중국평론통신사(中國評論通訊社)의 평론을 인용,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북한이 독자행보를 보이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함. 이 평론은 "북한의 거리낌 없는 도전행위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며 "중국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자로서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방화벽이 아니고, 중국과 한국은 이미 우호관계를 맺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주둔을 걱정하지 말고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커다란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이어 "동북아 정세의 평화적인 안정은 중국의 장기 발전에서 유리하다"며 "북한이 계속 멋대로 행동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사달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고 전망함. 평론은 또 "북한 문제가 계속 악화하면서 미국에 동북아지역 군사력 강화 빌미를 주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반도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와 함께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중국과 미국은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함. 북한과 미국이 일촉즉발 상태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 할 것"으로 추측하면서 "중국은 스스로를 한반도라는 전투차량에 묶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중국은 이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는 우산도 아니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작용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국지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정치·군사·외교적 입장"이라며 "만약(북한이) 더욱 강력한 도전을 시도한다 해도 결국은 자업자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고 북한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함. 평론은 "북한은 미국과 외교적 담판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 타격을 포함한 제재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중국 선택은 '기권일 것'이라고 말함. 군사적 대립에서는 북한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북한 핵문제에 의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함. 평론은 "북한은 미국과 수(數)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미국은 앞으로 북한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동북아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재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아울러 "북한은 이미 자신의 발전노선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은 과단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한국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중 타격 실시를 반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회담이 유보될 수 있고, 미국을 지지한다면 한반도는 심각한 재난의 소용돌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 <중국인 북한관광 핵심협 속 정상 운영>(2/15,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지난 2009년 핵실험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진과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를 잇는 관광코스가 중국인들에게 외면 받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임. 15일 연변지역 여행사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버스나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향하는 변경 관광코스 중 하나인 연지-나진 1박2일 관광이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다른 북한 관광코스는 겨울철을 맞아 대부분 휴업



상태임.

- 엔벤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관광 비수기라 많지는 않지만 한번에 30명 이내의 중국인 관광객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나진으로 떠나고 있다"면서 "이 코스는 핵실험 당일에도 정상 운영됐다"고 말함. 이 관계자는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측이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내린 관광객 입국 규제 등의 조치는 아직 없다"면서 "관광객 사이에서도 예약 취소와 같은 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1인당 750위안(약 12만8천원)을 받던 엔지-나진 1박2일 관광코스는 여행사들의 비수기 가격 조정으로 현재 430위안(약 7만3천원)으로 내림. 북·중은 과거 3~5개의 관광코스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관광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해 관광코스를 10여개로 늘림.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중국과 단기간에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음.
 - 엔벤의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은 중국인들에게도 한번 가보고 싶은 미지의 세계"라며 "현재 추세로 보면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수단의 하나로 관광 분야에 손을 대지 않는 한 핵실험과 관련된 북한 관광객 감소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함.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비자가 아닌 '변경여행통행증' 발급의 형태로 이뤄져 서방 관광객에 비해 수속이 편리함.
 - 지난해에는 북한 관광이 중국인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면서 두만강 유역의 엔벤지역 여행사들과 압록강 유역의 단둥지역 여행사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했음. 북한은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평양, 개성, 판문점, 금강산 등 기존의 관광명소 이외에 평안북도 동림군, 함경북도 경성군 등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자국민의 북한 관광 규제를 꺼낼 경우 당장 현금 줄이 차단되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 연내 1~2차례 추가 핵실험 계획 중국에 전달"(2/15, 연합뉴스)
- 북한이 연내에 핵실험을 1~2차례 더 실시할 계획임을 핵심 동맹국인 중국에 전달했다고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한 소식통이 15일 밝힘. 북한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회담에 나서게 하려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함.
 - 이 소식통은 "모든 게 준비된 상태"라며 "4차·5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곧, 아마도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그는 4차 핵실험은 3차 때보다 큰 10킬로톤(kg·TNT 1만t)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 시도로 보이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또 "북한은 추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특히 올해 농업·경제 개혁으로 곡물 수확량을 늘려 중국에 대한 식량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의 제재를 또다시 지지할 것이지만 중국이 합일할 제재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연료 공급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이 소식통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고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北핵실험> 아베 총리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2/13, 연합뉴스)

- 일본이 미국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금융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밝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아베 총리는 또 "금융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만큼 미국에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으로 2월 의장국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한국과 일본, 미국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비군사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금융 제재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2007년 '10·3 합의'에 따라 이듬해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함.

● "북한, 작년 4월 일본에 물밑 대화 시도"(2/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4월 일본 내 공작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제3국에서의 접촉을 제안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함.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세이이쿠인(聖學院)대학 부교수는 13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함.
- 미야모토 부교수에 따르면 간사이(關西) 지역에 사는 일본 국적의 40대 남성이 지난해 4월 자신에게 찾아와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향'이라며 북일 접촉을 요구함. 이 남성은 '적대 관계라도 접촉은 필요하다', '제3국에서 군인끼리 만나고 싶다', '교섭의 최종 목적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3가지 점을 접촉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중개료 등은 요구하지 않았음.
- 미야모토 부교수는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당시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의 측근이 실제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함. 하지만 북측의 메시지를 전달한 남성이 작년 7월 별도의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구속되면서 무산됨. 경찰은 이 남성의 자택 컴퓨터에서 북한과의 통신 기록을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 공작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도쿄신문은 마쓰바라 전 납치문제담당상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北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 비난(2/14,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지난 세기 조선과 아시아 나라들을 피로 물들이던 제국주의 일본의 재현이며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비난함.
 - 북한은 14일 '정치적 <섬나라>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베가 되찾겠다는 일본은 우경화, 군국화로 철저히 재무장된 침략국가를 의미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이 패망 이전의 식민지 지배체제로 복귀하는 데 있다면서 "일본의 아시아 재침은 예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함. 논평은 이어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정책은 기필코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규탄과 정치적 고립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핵실험 북한별도제재 검토안해"(2/15, 연합뉴스)**
 - 러시아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양자 관계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4일(현지시간) 밝힘.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가'란 연합뉴스의 질문을 받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함.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6자회담의 적극적 참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초래한 위협에 상응하는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북한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안보리 제재에만 참여할 것이란 의미임.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또 "아직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제안이 나오면 안보리 협의 제도의 틀 내에서 공조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언제쯤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란 질문에는 "두고 보자"며 즉답을 피함. 루카세비치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미국과 중국에만 사전 통보하고 러시아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러시아도 미국, 중국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계획에 대해 미리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함. 그는 "이에 대한 답으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에 그러한 행보를 하지 말 것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지 말 것을 촉구했었다"고 소개함.
 - 루카세비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이 군사력 강화 조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 그러한 행보는 한반도에 추가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자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역내 국가가 최대한의 자제심과 균형감각, 스스로 취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



감을 보여야 한다"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그러한 행동(한국 측의 군사력 증가)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함.

-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러시아가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을 통한 안보 확보 방식을 서로가 자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함.
- 루카셰비치 대변인은 이밖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이틀 동안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음. 그는 "실제로 12일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라브로프 장관과 케리 장관의 긴급 전화 연결을 원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 라브로프 장관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 중이어서 어려우니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 뒤로 13일에도 14일에도 미국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주장함.

바. 기 타

● 北, 李대통령 '정권교체' 발언에 "최후발악" 발끈(2/16,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정권교체(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언급한 데 대해 16일 "민족반역자의 최후 발악"이라고 맹비난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행위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인 제3차 핵실험 앞에 어떻게나 얼이 나갔는지 시간이 갈수록 낮두리"라고 비난하며 '만고역적', '대결병자' 등 각종 욕설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헐뜯었음. 또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에 둘 각오가 돼 있다"는 집권 초기의 악담 그대로 지난 수년간 민족공동의 이념과 성과물을 전면 부정하고 체계적으로 말아먹었다"며 한반도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 것은 미국과 이 대통령의 '반공화국대결책동' 때문이라고 거듭 비난함.
-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 '정권교체' 필요성을 거론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북핵 억제전략 협의...선제타격 개념 내주 논의(2/13, 연합뉴스)

-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함.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열리는 EDPC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



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 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핵 억제전략을 논의한다"며 "올해 안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키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번 EDPC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임. 작년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군사·외교·정보·경제적 측면의 대응전략이 망라된 '북한 핵위협 대비 맞춤형 전략'을 EDPC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함.
 -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으로 향후 수립될 맞춤형 전략에서 군사적 대응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뚜렷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입장이 확고함. 김 장관은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 선제타격론과 관련,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힘. 군 소식통은 "향후 EDPC에선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조건에서 선제타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은 당초 올해 10월 SCM 때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수립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다만 미국 측 일각에선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에서 핵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선제타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함.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던 1994년에는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핵시설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는데다 이곳저곳으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 군사적 공격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정확한 위치를 탐지·타격하는데 한미 협의체를 가동하고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힘. 군 관계자도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할 정도면 북한군이 전시상태에 돌입하고 우리 쪽도 '데프콘2'(사실상 전시상태)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며 "그때는 연합 정보자산이 총동원되기 때문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미, 원자력협정 등 갈등 가능성" <美의회 보고서>(2/14, 연합뉴스)
-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과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1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초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에서 "지난



2009~2012년 한미 관계는 전례 없이 강력했다"면서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계 등을 언급함.

- 보고서는 그러나 "이달 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런 이익 공유, 정책 우선순위, 개인적 친분 등의 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우선 대북정책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신뢰 구축 조치를 제안했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도 주목된다고 밝힘.
- 이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북무정상화와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보고서는 "(미국의) 일부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의회는 주한미군 북무 정상화와 관련한 예산을 이미 감축했다"면서 "더욱이 한·미 양국은 올 상반기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항상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함.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 수준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함.
-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최근 수개월 간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서 "한국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특히 "이 문제는 한국의 정부당국자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가 됐다"면서 "이를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함.

나. 한·중 관계

- <北핵실험>한·중 외교장관 통화...대응방안 의견교환(2/13,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양제츠(楊潔篪<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핵실험 실시 약 23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께(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양 부장과 통화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중국 외교부도 두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 사실을 발표하면서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 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2/14,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



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14일 "한일 기본조약에는 청구권에 입각한 '배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힘. 고노 전 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국제포럼에 참석,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함. 이는 식민지 피해 한국인들이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 따라 한국의 모든 대일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임.

- 고노 전 의장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 조약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문구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함. 고노 전 의장은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양국 신뢰관계 구축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함.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반대 여론을 무릅쓴 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경제협력이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전략적인 큰 결단"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명확히 문서로 된 사죄가 없었던 것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그때 사죄가 문서화되면서 양국이 '인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그는 "일본이 한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자국 가치관을 강요했던 역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하고 명확히 반성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음.
- 고노 전 의장은 강연 말미에 "12년 전 외상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한국인 청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고(故) 이수현씨의 의로운 행동을 언급했음.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할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이를 주도함.

● "일본, 박 당선인 취임식에 부총리·외상 특사 파견"(2/14, 연합뉴스)

- 일본이 오는 25일 열리는 박근혜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함. 아소 부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이은 내각 서열 2인자이고, 기시다 외무상은 대한 외교를 책임지고 있음.
-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요 각료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함으로써 작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냉각된 한일관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전함. 박근혜 당선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박해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일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는 것임.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전 재무상을 박 당선인에게 특사로 보내 일본 방문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음.

- 하지만 한국 측이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 대신 각국 대사 등 주한 외교 사절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히자 부총리와 외무상을 파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음.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한 때 "주한 일본대사만 참석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고 전함. 한편 미국은 톰 도널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취임식 특사로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檢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실형 땀 신병인도 착수(2/17,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됨.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이 명백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스즈키씨가 재판에도 불응하면 필석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을 공산이 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힘. 검찰은 또 스즈키씨가 일본에 있는 매한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데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함.
- ◇검찰 소환 불응 후 검찰청에도 '말뚝' 보내 =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음. 행인들에게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다"라고 떠들어댔음. 그는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두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종군 위안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본에 있는 스즈키씨에게 지난해 9월18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도 '다케시마 말뚝'을 보냄. 검찰은 말뚝 수령을 거부하고 되돌려보냄.
- ◇윤봉길 의사 유족도 즉각 고소 = 스즈키씨의 만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음. 그는 9월22일 블로그에 일본 내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자행해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고 막말을 퍼부었음. 윤 의사의 유족 측도 즉시 스즈키씨를 윤 의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스즈키씨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고심 끝에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로 함.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의 전쟁범죄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하



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함. 이 관계자는 "판결까지 나온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임.

- ◇실형 선고되면 신병인도 절차 착수 = 검찰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씨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임.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 출석요구를 위해 일본에 있는 스즈키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게 됨. 만약 송달이 되지 않거나 스즈키씨가 이를 수령거부하면 결석재판이 이뤄지게 됨. 소송촉진특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할 수 있음.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큼. 만약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스즈키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신세가 된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돼 노역장에 유치됨.

라. 미·중 관계

● <北 3차 핵실험 이후...美·中 대북외교 새판짜기 하나>(2/14,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 역학질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대(對) 한반도 외교가 일대 기로를 맞고 있음. 워싱턴과 베이징 내부에서 북핵 대응전략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는 '전략수정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 그동안 미·중 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해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꾀해왔음. 미국은 '압박'에, 중국은 '관리'에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었지만 일차적으로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는 쪽으로 G2(미·중)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음.
- 미국은 '전략적 인내' 기초를 내걸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현실적으로 북핵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 있었음. 중국 역시 6자회담을 열어 조속히 북핵을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속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며 북한을 적극 껴안아온 것이 사실임.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이 같은 G2의 북핵 대응, 나아가 대 한반도 외교에 근본적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음.
- 북한이 세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현실적인 핵능력을 과시하면서 '국면'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략을 급격히 전환하는 것은 명분과 모양새가 좋지 못한데다 결정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점이 일종의 딜레마임. 우선 미국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초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임.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1기의 북핵 대응전략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세스를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확산 위험성을 키워놓았다는 지적 때문임.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도 여전히 미지수임.



-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면 '포용' 쪽으로 전략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교수는 13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내키지 않겠지만 조만간에 다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테이블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비핵화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의제들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그러나 '도박판'을 더 키워보려는 북한의 의도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는 워싱턴으로서도 큰 부담임. 북한을 더 몰아세우라는 워싱턴 '매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음. 로버트 팔리 미국 켄터키대 패터슨 외교국제통상대학원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지속되는 봉쇄 정책"이라고 주장했음.
- 여기에는 북핵을 어정쩡하게 다룰 경우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중심이 '비핵화'에서 '확산방지'로 이동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점에 국제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함.
- 당장은 워싱턴의 스탠스가 '압박'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사정변경'에 따른 전략적 수정론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경우 국면전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옴. 새로 출범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로서도 딜레마적 국면에 놓여 있음. 전통적 혈맹관계에 기초해 일방적 감싸기로 일관해온 대북 포용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임 특히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해온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현저하게' 약화됐음이 확인되면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전례 없이 높은 분위기임.
- 차이젠(蔡建) 푸단(復旦)대 교수는 홍콩 언론에 "말로만 제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옴. 대북원조를 중단한 경우 자칫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 붕괴와 대량 난민사태 발생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중국이 경제원조 축소와 같은 대북 지렛대를 실제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은 편이임.
- 베이징 소재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스테파니 클라이네 알브란트 동북아 담당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후진타오 체제 때보다는 대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코너로 몰아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함.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일단 동참하되, 북한이 실질적으로 '아파할' 독자 제재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이란 얘기임.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무력제재 근거가 될 유엔 헌장 7장이 언론성명 문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됨.

- 중국은 특히 제재국면의 동력이 떨어지는 일정시점에서 대화국면 조성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4년 넘도록 '휴면'상태인 6자회담의 불씨를 되살리며 다시금 북핵 논의의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외교력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음. 북한을 겨냥한 제재국면이 심화되는 가운데 물밑으로는 국면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동성도 점차 커져가는 기류임.

마. 미·일 관계

● "일본, 미국 고관 방북 정보 소외"〈아사히〉(2/15, 연합뉴스)

- 미국 고위 당국자가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 사이에 3차례 비밀리에 방북했지만 일본에 방북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2011년 11월 미군기가 미국령 괌의 공군 기지를 출발, 도쿄 요코타(横田) 미군 기지에서 불도저 등 중장비를 실은 뒤 평양으로 향했음. 이 비행기에는 태평양군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북측과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의 유골 수색·수집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됨.
- 작년 4월7일과 8월18~20일에는 또 다른 미군기가 각각 괌 기지와 평양을 오갔음. 시드니 사일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남북한 담당관과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이 탑승했고, 이들은 북한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아사히는 전함.
- 일본 정부는 공군 기지 등을 관찰하는 애호가의 신고 등을 근거로 미군기의 방북 사실을 파악한 뒤 미국에 설명을 요구했음. 미국은 2011년 11월의 방북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설명했지만, 나머지 2차례 방북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라며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했음. 미국 국무부는 일본 외무성에 "더 이상의 문외는 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함.
- 사일러와 디트라니의 4월, 8월 방북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음. 일본이 이들의 방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공유할 수 없는 '정보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함.

바. 미·러 관계

● 〈미국-러시아, 외무장관 간 전화불통 네 탓 공방〉(2/17,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 3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무장관 간 전화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음.

-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이후 아직 두 장관 사이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두고 양국 외무부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 것임.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아직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러시아 측)이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함. 놀런드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외교 현안을 다루야 한다"면서 "케리 장관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음. 놀런드 대변인에 따르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 12일 저녁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긴급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함. 한국, 중국, 일본 외무장관들과 통화한 뒤였음.
- 러시아 측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라브로프 장관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들었음. 놀런드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요청을 반복했지만 러시아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같은 놀런드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보도문에서 "양국 외무장관 사이의 전화 통화 시간 조율과 같은 순전히 실무적 문제가 미국 기자단의 병적일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함. 놀런드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 표시임.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라브로프 장관이 12일 미국 측의 첫 통화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으며 대신 다른 날짜를 제시했던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 측은 그동안 응답을 하지 않다가 놀런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러시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음. 루카세비치는 "지난주 라브로프 장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프리카 순방 일정에도 케리 장관과의 전화 통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었다"며 "우리는 미국 측에 양국 장관이 14일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구체적 시간대까지 적시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케리 장관 측으로부터 확인이 없었고 그 때문에 미국 측이 통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루카세비치는 그러면서 미국 측이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함.
- 전문가들은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구축 계획과 상대국을 겨냥한 양국의 상호 인권법 제정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양국 외무장관 간 소통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센카쿠 해역 감시…CCTV 생중계(2/14, 연합뉴스)

- 중국 해양감시선(해감선)이 14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감시 활동에 나섰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중국 해감 50, 66, 137호가 편대를 이뤄 센카쿠 해역에서 순찰에 나섰다면서 해상 활동 장면을 현장 생중계로 보도했음. 편대 지휘선인 50호는 일본 순시선의 경고를 받고 "중국의 관할해역에 들어온 일본 선박들은 당장 나가달라"고 맞섰다 고 전함.

● "일본 전투기, 중국 정찰기에 5m까지 접근"(2/17,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공역에서 중국 정찰기에 5m 거리까지 다가가는 초 접근 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짐.
- 17일 환구시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소장(少將) 겸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인 튀위안(羅援)은 "최근 일본 F-15J 전투기가 우리 원-8에 5m까지 접근하는 일이 있었다"며 "조금만 실수가 있었다면 추락 사고가 날 뻔했다"고 주장함. 프로펠러기인 원(運)-8(Y-8)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송기,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기종임.
- 중국 인민해방군이 일본 전투기가 자국 항공기에 초 접근 비행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최근 일본이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사건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해석됨. 중국 해군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이후 Y-8과 쥘(殲)-10(J-10)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를 수시로 센카쿠 영공 가까이 접근시키면서 일본을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작년 12월 13일에는 해감총대 소속 소형 프로펠러 순찰기인 Y-12를 센카쿠 영공에 처음 진입시켜 일본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함.

아. 중·러 관계

● "중국 외교부장 20~22일 러시아 방문"〈러 외무부〉(2/14, 연합뉴스)

- 중국 양제츠 외교부 부장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4일(현지시간) 밝힘.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양 부장의 방러 계획을 전하면서 그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발전과 전면적 파트너십, 전략적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고 올해로 예정된 러-중 정상회담 준비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루카세비치 대변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양 부장은 이날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나 무력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자. 기. 타

- **한·중·일, 20~21일 도쿄서 3국 FTA 준비회담(2/17,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이 20~21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준비회담을 연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함.
 - 이번 회담에서는 올봄으로 예정된 본회담을 앞두고 교섭 방식이나 일정 등을 협의함. 중·일 양국의 군함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준비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논의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신문은 전함.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아세안의 FTA 파트너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봄에 첫 회담을 여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앞서 한·중·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3국 FTA의 협상 개시를 선언함. 세나라는 2003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협상에 착수하게 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